

Online Series

2019. 08. 16. | CO 19-16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일·북한 분야 의의와 과제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그리고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을 통한 광복의 완성’을 새로운 한반도, 즉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한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공간(時空間)의 범위를 확장했다. 당면 현안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하고 평화경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한 불가역적 입구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공간(時空間)의 확장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일·북한 분야는 큰 틀에서 세 가지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간을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장했다. 문대통령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 즉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위한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그리고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을 통한 광복의 완성’을 제시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을 출발점으로 동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한국형 세계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아울러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교량국가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평화경제에 대한 강조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비핵·평화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대륙과 해양경제를 연계함으로써 한반도와 세계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평화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경제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북한의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관철을 위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개발을 촉진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경제권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한반도체제를 향한 긴 호흡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와 2045년 광복 100주년 통일을 목표로 제시했다.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며, 통일의 시점으로 제시된 2045년에는 사실상 신한반도체제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정책기조 위에서 단기적 관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한반도, 즉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한반도 정세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한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한반도, 즉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지향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당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다.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인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적실성있는 판단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무력시위

금년 5월 4일 이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의 원인은 남북관계 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비핵화협상에 대한 불만 표출의 개연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도발은 협상국면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협상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체제결속의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남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며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선미후남(先美後南)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일정기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의 무력시위 또는 도발이 예상되며, 남북관계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비핵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북미 대화 재개 시기 여부가 아닌 양측 간 비핵화 입장차이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 북한에게는 불만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 내 기류

북한의 무력시위를 문제로 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내 분위기는 부정적이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이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협상 교착국면 장기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타결을 통해 미 대선국면에서 극적인 컨벤션효과를 도모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핵문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무역전쟁 및 홍콩문제 등 중국 이슈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북핵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집중된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은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각인되었다.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인들의 인식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지만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핵 문제의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이슈가 방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모라토리엄 범위내에서 핵물질 보유량 증대 및 미사일 기술 개선 등 수평적 핵고도화를 도모하는 대미 압박 및 협상력 제고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북한의 행위는 미국 내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아울러 북미 협상에 제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3.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문 대통령의 임기는 곧 후반으로 접어들며, 2018년 가속화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비핵화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은,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무력시위와 대남 비난에 주력하고 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 지체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현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 중장기 정책기조 견지

향후 대북·통일정책은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추진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3회, 북미 3회, 북중 5회, 북러 1회 등 총 12회의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협상시한을 연말로 정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대화국면의 파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북한이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사실은 이미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현하는 평화경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전략 대응체제 모색

기본적으로 남북 신뢰관계를 유지하되,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 기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초부터 금년 초까지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교류와 안보문제의 진전을 병행했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배제하고 무력시위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북미 관계의 진전 없는 남북관계의 한계를 자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보여준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적 채널을 유지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문제 해결 촉진자 역할 확보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중요한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북미 불신관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며, 우리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정에서 전략적 목표를 관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초기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시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창의성의 발현이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상응조치를 조합해내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비핵화는 영변 핵 단지의 완전한 폐기를 최소 조치로 동결, 비핵화 개념정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를 포함하는 ‘영변+a’의 다양한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5·24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및 종전선언(평화선언)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합은 초기 상응조치로서 현실성이 있다.

■ 신한반도체제 입구 형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즉 신한반도체제를 지향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통일을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사관이며 장기 국가 비전이다. 현 정부는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불가역적 입구의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를 견인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KINU 2019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